

금남로에서



신항락
이사·논설주간

박빙의 선거에서 그 결과관 “하늘도 모른다”고 했다. 과거 노무현 후보가, 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선거 직전까지는 하늘도 모를 일이었다. 이회창, 문재인 후보는 다 된 밥이라고 여겼으나 결과적으로 설익은 밥이 된 것이다. 낱곡과 전체 투표율, 연령대 투표율, 보수와 진보세(勢)의 변화 등이 큰 변수로 작용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하지만 호남과 영남에서 치러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만큼은 어리연도 이미 결과를 알 수 있었다. 호남에선 민주당의 노란 깃발이, 영남에선 새누리당(전 한나라당)의 파란 깃발만이 나타났다. 물론 부산의 민주당 조경태 의원과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있기는 하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늘에서 자란 돌연변이일 뿐이다.

오는 6월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도 경상도 판은 흔들릴 수 없다는 게 다수의 시각이다. 소위 안철수 신당이 파고를 여러이

안철수 신당이 제대로 되려면...

없는데다 그 쪽의 정치성향 또한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안 의원의 태생지인 부산에서조차 열기를 찾기는 어렵다.

이에 반해 심진강을 건너면 호남에서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지난해 10월 이후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안 신당이 민주당에 비해 2배 가까이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파괴력을 키워온 것이다.

안 의원의 신당에 대한 지지 열기는 무엇보다 차기 수권(受權) 대상으로 호남사람들의 열망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데 있다. 민주당에 기대기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예기다. 대선 이후 그 많은 기회를 얻고서도 위기로 내몰리고, 친노(親盧)의 프레임에 갇혀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힌 탓이다. 김한길 대표가 13일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으나 의지만이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지지도 반전, 내리막 추세

그렇다고 안 신당도 의지만으로 지지율을 붙잡아 둘 수는 없다. 현재 광주·전남에서의 지지도는 내리막 추세다. 광주일보가 지난 10~11일 지역민 21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주당과 안 신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안 신당의 변화를 확인하게 얻을 수 있다. 민주당에 2배나 앞섰던 안 신당이 광주에서 30.6%로 민주당(34.0%)에 밀리고, 전남에선 23.0%대 43.5%로 오히려 반토막이

되면서 추월을 당했다.

이러한 민심의 이반은 무엇보다 안철수 신당의 비정상화와 불확실성에 있다. 비정상화의 첫 번째는 야권과의 연대 거부다. 안 의원 측 ‘새정치추진위원회’ 윤여준 의장은 최근 “야권 연대란 있을 수 없으며, 광역단체장 후보는 다 내야 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필연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게 현실화될 경우 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가 당선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재선이 확실시 되지만 신당이 그럴듯한 인물로 맞붙을 놓는다면 그 득표율만큼 새누리당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당 후보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민주당을 의도적으로 허물어 그를 밟고 세(勢)를 넓히려 한다면 안 의원이든, 신당이든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호남에서의 하락세는 이를 염두에 둔 지역민의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안 의원은 그동안 한국 정치사에서 술하게 사라졌던 제3당의 운명을 경계하 새겨야 한다.

또 하나, 안 신당이 호남만을 가지고 일정 지분을 챙기려 한다면 그건 오산이다. 광역단체장 1~2석 정도, 시·군 단체장 몇 십 석을 교두보로 삼아 지방선거 이후 전국을 상대로 ‘스핀지 효과’를 노리겠다는 계산일진대, 이는 손가락 썩법에 지나지 않는다.

출신지인 부산과 경남에서 노무현 후보가 얻었던 30% 이상의 지지를 일구어 대구·경

북, 충청, 강원, 수도권으로 의견을 확대해야 한다. 그게 호남사람들의 바람이자 지지에 대한 응답이다.

신당에 참여한 인사들의 면면도 시원치 않다. 여기에, 야권의 퇴물 정치인 내지 일부 현역의원들을 빼 내가는 식이라면 ‘그 나물에 그 밥’이자 그가 주장하는 새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야권 연대는 당연한 수순

모호한 정체성과 불확실한 로드맵도 그에겐 아킬레스건이다. 새정치, 즉 변화와 개혁을 강조하지만 실체는 없고, 현상만 있다는 지적들이 많다. 새정치추진위원회가 이르면 27일경 창당 일정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역시 급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번 6·4지방선거는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다. 대선 이후 좌잡한 심경으로 지낸 호남사람들이 안 신당의 움직임과 선거 결과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제 신당이 제대로 된 창당을 하려면 이모두가 비정상화에서 정상화로, 불확실성에서 확실성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하늘도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알게 하려면 그 길로 가야 한다. 아니라면 하락세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hshin@kwangju.co.kr

社說

순환도로 매입 공방, 광주시 적극 대처해야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문제를 놓고 법인 항소심에서 패소한 맥쿼리 측이 광주시를 상대로 반격에 나섰다. 광주시가 승소 직후 2순환도로 매입의 단초 마련과 함께 3479억 원의 세금 절약을 하게 됐다고 밝힌 데 대해 맥쿼리가 “사실과 다르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정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맥쿼리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자본구조를 원상 회복하더라도 광주시의 재정 부담을 줄여줄지 않는다”면서 “3479억 원의 이자 절감 주장도 광주시만의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이자 절감으로 증가한 회사 이익은 주주들의 배당 몫이라는 얘기다.

맥쿼리는 특히 “자본구조를 변경했다고 해서 광주시의 재정이 더 들어갔다면 잘못된 행위이지만,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며 강운태 시장이 제안한 ‘매각협상 개시’에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맥쿼리 측의 일방적 주

장일 뿐이지 설득력이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투자자가 실시협약 등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을 똑같이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비율을 28.7%에서 6.94%까지 낮춘 완전 자본 잠식상태에 빠뜨린 게 가당한 일인가.

또한, 맥쿼리가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10%로 높여 6년간 이자로만 1947억 원을 받아냈고, 적자를 내세워 그동안 뜯어낸 보조금만도 1190억 원에 이른다는 것은 어떤 식이든 변명의 여지가 없다. 대주주라는 이유로 광주시와 회사에 막대한 누를 끼치고서도 내부의 문제라든지, 원상 회복만 하면 된다는 식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물론 광주시가 통행량 예측을 잘못해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책임이 크지만 그렇다고 맥쿼리의 부당한 처사까지 자신들의 일로 돌릴 수는 없다. 광주시는 대법원의 상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운영권 매입을 위한 법적 대응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대학 구조개혁 지방대학만 타깃 안 된다

교육부가 이달 내에 새로운 대학 구조 개혁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광주·전남 등 지방대학에 비상이 걸렸다. 대학운영의 기본 요건인 학생 확보 실패나 경제여건이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 취약해 불이익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 대학구조 개선은 지금 한 과제다. 저출산에 따라 고교 졸업생 수가 계속 줄어 2023년이면 16만 명의 입시생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대학 110개 정도의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두르지 않으면 대학이 공멸할 처지다.

따라서 광주·전남을 포함한 대학들은 입학 가능한 학생 수에 맞춰 학과를 통폐합하거나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대비해야 한다. 만일 적극적이지 못하다면 빈 건물만 텅텅 남았는 대학도 생겨날지 모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벌여왔다. 전체 대학을 절대평가를 통

해 5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자율적·강제적으로 정원을 줄이는 것이 주된 내용이어서 심지어 문을 닫는 대학도 나올 수 있다.

문제는 기준이다. 지금까지 당국은 취업률이나 학생 충원율 등을 제의의 중요 지표로 삼았다. 이 때문에 모든 측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지방대학들은 구조조정이 논의되면 존재의 위기감을 느껴야 했다. 이미 진행된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 상당수 지방대학이 포함될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조정에 있어 지방과 수도권 간의 차이,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 지방대학이라고 해서 그 수준이 서울 등지에 못 미치는 것만은 아니다. 학과별로 얼마든지 수도권에 능가해 좋은 인재를 길러내는 대학들도 많다. 대학 구조개혁이 단순히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교육부는 유념하기 바란다.

은펜클럽



강대석
남도향토문화연구원장

친구! 오는 6월4일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결전의 날도 불과 5개월 남지 밖에 남지 않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수 출마의 어려운 결정을 내린 자네의 용기에 경의와 박수를 보내며 이 글을 쓰네.

이전 시대가 달라졌지만 다산선생은 목민심서 첫 장에서 ‘다른 벼슬은 구해도 좋으나 목민관(시장, 군수 등)의 벼슬은 구해서는 안 된다(德育求來나 牧民之責은 不可求也니라)’고 했다. 그 이유를 ‘목민관이란 덕이 없어도 위엄이 없으면 수행할 수 없고, 뜻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수행할 수 없으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목민관이 되면 백성들이 피해를 당하고, 괴로운 고통으로 길 위에 쓰러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비난하고 귀신들이 책망하여 그 재앙이 후손들에게 까지 미칠 것이다. 그런데도 목민관을 구

목민관이 되려는 친구에게

하겠는가’ 라고 했다. 그만큼 목민관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뜻이었겠지.

여기에서 다산이 말한 목민관(牧民官)이란 ‘백성을 기르는 관리’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닌 ‘백성을 보호하는 관리’라는 뜻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네. 즉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듯 백성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보살피며 그 의무를 다해야 하는 관리를 의미한다고 보네.

민선 자치가 실시 된 이후 시군간의 실태를 보면 지역 간에 많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네. 일부 시군은 활발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반해 어떤 시군은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시장군수의 역량이 매우 중요함을 느끼면서 군수를 하고자하는 자네에게 친구로서 외마직이지만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네.

먼저 풍부한 행정경험과 민주적 리더십을 가진 자네는 행정 경영자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네. 따라서 이미 출사표를 던진 이상 열심히 뛰어 꼭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당선을 위해 절대 돈은 쓰면서 선거를 치르지는 말게. 왜냐하면 부정행 방법으로 당선되면 당선된 이후에도 그것이 명에가 되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네. 또한 본선생각에 재입 중 돈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중론으로 그럴 경우 오히

려 명예에 먹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네.

둘째는 당선이후 지킬 수 없는 공약을 절대로 남발하지 말게. 공약(公約)이란 지역주민들에게 표와 교환하는 약속어음과 같은 것으로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며 만약 지킬 수도 없는 공약(空約)을 남발하여 당선된다면 그것은 유권자를 상대로 한 사기행각과 별반 차이가 없네.

셋째는 지자체 실시 이후 대부분의 시군들이 지방선거로 인해 민심이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게 현실이네. 그러므로 절대 상대후보를 비방하거나 흑색선전으로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말게. 선거는 자기의 비전과 공약으로 선택받는 선의의 대결이 되어야 함을 명심하고 자네가 먼저 수범을 보이게, 그리고 만약 당선이 된다면 연임을 염두에이지 말고 지역민심을 통합하는데 노력하게. 특히 상대후보를 지지한 사람들도 역사지사의 마음으로 포용하고 탕평인사와 전 입자의 시책들도 가끔씩 승계하여 혼란을 최소화 한다면 자연스럽게 민심은 통합되고 자네의 덕망은 높아질 것이네.

나는 개인적으로 단체장의 3선(12년) 연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하네. 요즘 정치권에 대한 논거가 되고 있지만, 3선 연임이 조직의 안정성이란 장점도 있는 반면 권력의 장기적 집중화가 주는 폐단이 더 크다는 것이

네. 현행 체제에선 한번 당선되면 큰 과오가 없는 한 3선 연임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권력이 한곳으로 집중되어 비리의 운상이 되기 쉽다는 것이지, 또한 공무원들을 적자생존(말없이 잘 받아 적는 사람만 살아남는)이란 농담처럼 영혼이 없는 공무원으로 만들며, 주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3선 연임 단체장을 낸 지역이 다른 시군보다 특별히 발전된 것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잘못된 시책을 장기간 고수할 경우 그로인한 고통을 고스란히 당해내야 하는 폐해도 적지 않다는 것이네.

끝으로 자네의 청렴함을 믿지만 선거 중에는 물론 당선 이후에도 항상 모든 유혹을 경계하게 하라네. 흔히 선거직 공무원을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듯 우리 주변에서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 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음을 상기하고 항상 초심을 잃지 말게. 하연된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자네의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무한한 지원을 보내네. 건투를 비네.

은펜클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無 等 鼓

중국 전국시대의 전락가 오기(吳起)는 위나라 장군으로 있는 동안 76번의 전투를 치러 64번을 이겼다. 나머지는 모두 부자였다. 그는 승리의 비결을 기록한 오자병법(吳子兵法)에서 ‘병사를 아끼고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병사들이 가까이 전쟁에 나서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를 실천했다.

사기(史記)에는 오기가 병사를 얼마나 아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나와있다. ‘오기는 위나라 장군이

복걸에서 돌아오던 알렉산더의 군사는 ‘게드로스 사막’을 횡단하던 중 물을 찾지 못해 반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간신히 물을 찾아낸 병사가 투구에 물을 담아 건네자 대왕은 “모두 함께 먹지 못할 바에야 마시지 않는 게 낫다”며 물을 땅에 쏟았다.

오기의 이야기에는 후일담이 있다. 그 병사의 어머니가 나중에 이 일을 듣고는 나 아졌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나와있다. ‘예전에 오기 장군이 그

물을 버린 이유

이 아버지의 고품도 되자 일반 병사들과 똑

이 아버지의 고품도 빨아줬는데, 그이는 물러서지 않고 싸우다 전사했다. 장군이 이

때는 자리를 깔지 않았으며, 평균급 때는 말이나 수레를 타지 않았다. 인젠가 병사 중 한 명이 다리에 쪼기가 났는데 오기가 입으로 빨아 고품을 빼냈다.’

물론, 오기의 행동은 충성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적절히 계산된 것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전장에서 부하의 고품을 직접 빨아내는 사령관을 ‘뒤돌아 보지 않을’ 병사는 없을 것이다. 오기는 한 번 입을 더럽혀 수만 병사의 마음을 얻었다.

중앙아시아와 인도에 이르는 광대한 세계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도 오기에 못지 않다. 기원 전 325년, 인도 정

제 내 자식의 고품을 또 빨아주었으니 그 애도 곧 죽게 됐다’는 이유였다.

오기와 알렉산더가 강력해 지도자가 된 것은 병사를 아끼고,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얻어냈기 때문이다. 병사의 어머니가 슬퍼한 까닭은 목숨을 바치더라도 그런 지도자를 따를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이야기가 사랑받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런 지도자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다시 시작된 정치의 계절, 4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홍행기 사회1팀장 redplane@kwangju.co.kr

기고

전남농업의 신성장 동력을 찾아서



박종수
농협전남지역본부 본부장

월가 투자전설로 불리는 짐 로저스는 앞으로 20~30년 안에 농업이 가장 수익성 높은 사업 영역이 될 것이라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젊은이라면 MBA(경영학 석사)가 아니라 농업 학위를 따라고 권고한 바 있다. 금융업은 이제 한계 시장에 직면하고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짐 로저스가 던진 화두는 우리 국민의 식량창고 역할을 담당하는 농도 전남으로서의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실시한 전국 156개 시군의 농업경쟁력 평가 결과상위 30위권에 전남의 7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남은 한국 농업을 선도하는 곳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다. 더군다나 작년 말 기준으로 전남의 친환경농업 비율이 전국의 49.8%를 차지하고, 인증단체별 제

배면적도 유기농과 무농약이 각각 전국의 35.9%와 65.2%를 점유해 전남이 친환경농업 1번지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러한 전남의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을 바탕으로 FTA(자유무역협정)와 기상이변 등에 적극 대비하고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고부가가치의 농업기술 개발 등을 위해 전남의 농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그동안 발생했던 원전 사고 중 최악의 사고로 불리며 현재까지도 일본산 수입 식품의 방사능 오염 여부가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를 계기로 우리는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됐다. 이제는 에너지도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농수축산물 생산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전기와 석유이지만 국내 전기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환경오염이 야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의 그린에너지 연구개발 수준은 미미한 상태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농수축산물을 태양력이나 풍력을 이용한 그린에너지로 재배한다면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린 에너지로 재배한 친

환경 농수축산물은 녹색 전남의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고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크게 높여 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한계작물 재배지역의 북상과 같은 농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작목 육성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환경부 연구결과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평균온도가 2℃ 상승하면 온대과수(배·포도 등) 재배면적은 34%,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은 70% 이상 감소하고, 3℃ 상승 시 사과 재배지의 45%, 5℃ 상승하면 벼 생산량이 평년대비 15% 줄 것이라고 한다.

이상기후, 병해충, 태풍, 폭염 등 기후변화는 이제 우리 일상의 삶에 직간접적인 위협을 주고 있으므로 새로운 작목 육성을 통해 미래의 위기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전남의 여러 시군에서 여주, 아스파라거스, 콜라비, 망고, 비파 등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는 능력이 점차 높고 있어 한반도의 최남단인 전남의 특새 작목으로 소비 시장 상점이 절실하다.

아울러 우리 농산물 애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도 전개해야 한다. 지금 우리의 건강은 산업논리에 밀려 수시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수입농산물의 범람과 많은 인공첨가물로 만들어진 가공식품,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유전자 조작 작물(GMO) 등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음식문맹자와도 같다.

우리의 아이들은 농산물도 공산품처럼 가까운 마트에만 가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농업과 농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제2의 신도농이 운동으로 식농불이(食農不) 운동을 전개했으면 한다. 먹거리와 농업은 하나다. 농업이 없으면 음식도 없다.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농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운동을 함께 펼쳐야 한다.

농업은 경제 논리로 따질 수 없는 인류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 산업이지만 국민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난 곡물 자급률과 농업 기반의 약화는 우리 먹거리의 비중을 확대시킬 것이고 이는 우리의 생명줄을 외국의 대형 농업회사에 맡기는 격이 된다. 이러한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의 농업을 지키기 위해 전남이 앞장서야 한다.

앞으로 우리 전남은 친환경 에너지를 결합시킨 농수축산물의 개발과 새로운 특새 소득 작목의 개발, 그리고 지역 농산물 애용 운동 활성화 여여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 농업 최후의 보루는 전남 농업이기 때문이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63 문화 1부 2200-661 문화 2부 2200-651 여론대체부 2200-621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본부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지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문 화 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